

‘과학 대 사회’의 복합적 갈등

생명복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서 ‘과학 대 사회’의 쟁점은 항상 복합적인 면을 갖고있는 갈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과학이 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기여하려면 과학자들은 우선 진리가 윤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윤리임을 성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과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자세로 탈바꿈해야 한다.



金 煥 錫

(국민대 사회과학부 교수)

요즘 생명복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예에서 잘 보듯이, 과학과 사회에 대한 갈등은 종종 윤리를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논쟁인 것처럼 표현되곤 한다. 그렇지만 이는 실상과 다르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 자체가 항상 일종의 윤리적 주장들을 만들어낼 뿐더러, 사람들은 일단 갈등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입장을 윤리적 이상으로 채색하여 지지를 더 많이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윤리는 자신의 편에만 있고 반대편은 윤리가 없이 행동한다고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윤리를 추구하지만, 너희들은 자기이익을 추구할 뿐’이라는 식으로. 그러나 ‘과학 대 사회’의 쟁점은 항상 복합적인 면을 지닌 갈등으로서, 이 속의 각 분파는 자신의 윤리적 이상

을 지니고 있다. 각 분파는 또한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사회적 동기(사회학자는 종종 이를 ‘이해관계’라 부름)와 관념 및 이상(이는 ‘이데올로기’라 부르곤 함)을 창출해내곤 한다. 즉 과학자 분파든 비과학자 분파든 각각의 사회적 조직과 그에 따른 일종의 이해관계 및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40년 전에 토머스 쿤이 발표한 「과학혁명의 구조」란 책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쿤의 ‘패러다임’은 전문가 집단인 과학자사회에만 적용시킨 개념이었지만,

과학자들이 내세운 ‘진리’

먼저 과학자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자. 과학자들이 목표로 하는 이른바 ‘진리’(Truth)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성을 지니며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존중되는 관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관념들이 지지하는 대상은 객관적인 실재로서, 그 자신 외의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자연 실재를 가리킨다. 과학자사회에서 ‘진리’란 어떤 종족에서 숭배되는 신성한 종교적 상징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유일신 중

교의 그것과 가장 닮아 있다. 누구를 과학자로 간주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가 이 ‘진리’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숭배행위 자체가 보다 많은 ‘진리’의 발견에 있으며, ‘진리’의 발견자-아인슈타인, 뉴턴, 갈릴레오 등은 마치 성직자와 같은 신성한 인물로서의 카리스마를 지니게 된다.

흔히 ‘진리’는 사실에 관한 것이며 가치 판단과 무관한 인식론(epistemology)의 범주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진리’는 윤리적 이상의 모든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윤리(ethics)의 한 범주라고 방어하는 것이 더 쉽다. 물론 우리는 윤리적인 것(=당위)과 인식론적인 것(=사실) 사이에 구분을 대체로 할 수 있지만, 과학활동을 추구하는 과학자사회에서 이러한 구분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자사회에서 ‘진리’의 추구하고 더불어 이미 성취된 ‘진리’에 대한 존경은 의무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는 이상을 인식론적인 이상으로서보다 주로 윤리적 이상으로서 간주한다면, 과학적 진리의 호소력과 견고한 이성을 이해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즉 과학은 최근의 탈실증주의 내지 상대주의적 과학관의 인식론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가 그랬듯이 비신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논리로 무장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종교적 신념은 두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당위, 도덕)에 대한 처방이고 둘째는 초월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숭배이다. 과학적 진리도 이와 동일한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삶의 도덕적 방식

으로서의 진리 추구하고 신성한 대상으로서 간주되는 '진리' 자체가 그것이다. 인식론적인 비판은 과학의 이러한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진리'가 과연 객관적이나 아니냐, 또는 그것에 도달할 확실한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진리'라는 이상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 숭배자들은 신에게 도달하는 어떤 최종 보장이 아니라 신에게로 통하는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서 구원을 발견한다. 이와 비슷한 구조를 지닌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비과학자 분파인 일반인의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사회적 행위에 윤리적 주장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은 거의 상식에 속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거나 권유하고 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리적 이상을 환기시키면서 타인의 행위를 비판하곤 한다. 서로 다른 도덕적 이상들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초로서 사회학자들은 종종 계급, 성별, 인종, 연령 등을 거론한다. 사회운동이란 이렇게 분화된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조직화된 집합행동이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인종차별 반대운동, 환경운동 등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집단 연대에 대한 헌신을 창출하고, 이는 그 구성원들이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윤리적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집약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하나의 행복한 도덕적 대가족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이와 반대로, 대립하는 집단 각각은 자신을 도덕적 후광으로 감싸고 다른 집단에 대한 자신의 지배를 이러한 도덕적 이데올로기로써 정당화하려 시도하곤 한다는 말이다. 이는 물론 현실 속의 어떤 갈등 속에서는 한편만이 주로 도덕적 주장을 무기로 휘두르는 걸 볼 수도 있다는 사실(예컨대 생명공학의 윤리 논쟁에서처럼)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저항집단의 경우에는 강력한 도덕성을 움켜쥐고 그것을 담지하는 조직을 형성할 때에만 반역에 성공할 수 있다.

과학·사회집단 협력해야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닌 근대 산업사회들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사회운동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적 자원이 풍부하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다양한 도덕성으로 넘쳐 흐른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 정치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경험 대부분이 다양한 집단들의 대립적인 도덕적 주장들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삶의 바탕을 이루는 감정적 에너지 중 상당 부분은 이러한 다양한 집단 호소의 동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을 신봉하거나 사회운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투쟁에 몰두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학자사회와 일반사회 모두에서 이렇게 윤리적 측면이 중요하고 '생명윤리' 논쟁에서처럼 각 집단이 지닌 서로 다른 윤리가 충돌한다면 논쟁 해결의 실마리는 과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흔히 과학자사회 내부에서 생긴 논쟁은 오늘날 실험장비라는 기술적

수단에 기초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을 갖는다. 사실 이 점이 과학적 논쟁과 다른 학문에서의 논쟁을 가르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다른 학문이나 일반사회에서의 논쟁과는 달리 과학적 논쟁은 '보다 정밀한' 실험장비를 서로 앞다투어 구하려는 노력을 자극한다. 그런데 논쟁이 이렇게 보다 '기술적'이 될수록 논쟁 해결을 위한 장비 획득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사회로부터 받는 걸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과학자사회는 이런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의 기득권층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과학자사회가 기득권층과 함께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공모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동안 거대화, 산업화의 길을 걸어온 현대과학이 처한 현실이다. 따라서 과학이 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려면, 과학자들은 우선 '진리'가 윤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윤리임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반사회가 주장하는 다양한 윤리와 비교하고 소통하며 결합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사회의 다양한 집단들과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열린 자세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일이 이미 기존 구조에 깊이 편입된 과학자의 개인적 결단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과학에 대한 정책결정에 과학자집단이 다른 일반사회 집단들과 함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의 제도들(예컨대 합의회, 과학상점, 참여설계 등)을 확립하고 활성화하는데 누구보다 과학자가 앞장서야 하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57